

與 “한·미 협상 비준 대상 아니다… 특별법 신속 처리 방침”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재정위원장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관세 국회 비준하면 한국만 구속”...국힘 비준 주장에 기존 입장 고수 여야 원내대표, 필버 오남용 방지법 논의...與 쿠팡 바로잡기 TF 발족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제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법안 처리 일정에 따라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미이행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큰 파장을 낳은 데 대해 “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관해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열리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한정에 정책위의장 및 임이자 재경위원장 등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된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확정은 아니지만 사회권 이양과 전자투표 도입, 두 개 내용으로 압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합의되면 오는 29일(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남근 의원을 단장으로 한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도 전했다. TF는 당초 27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애도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 2일로 회의를 미뤘다.

김 원내대변인은 “2월 2일 첫 TF 회의를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할 예정”이라며 “쿠팡에 대한 국회 연성정문화에 참석했던 상임위를 중심으로 소속 의원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진원 강진군수, 민주 재심서도 공천 불가

불법 당원 모집 의혹...당원 자격정지 1년→6개월로 감경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강진원 강진군수가 중앙당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는 성공했으나, 6·3 지방선거 공천 티켓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징계 기간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선거 일정과 징계 기간이 맞물리면서 ‘민주당 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봉쇄됐기 때문이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강 군수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심리한 끝에, 당초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6개월’로 감경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강 군수의 소명 내용을 일부 인용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경’에도 불구하고 강 군수의 민주당 공천 도

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감경된 징계 기간(6개월)을 적용하더라도, 당내 경선과 공천 심사가 한창 진행될 시기까지 당원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당규상 ‘당원 자격정지’는 당원으로서 권한과 권리 행사가 전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강 군수는 이번 결정으로 당적을 유지한 채 명예회복을 노리려던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 링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앞서 강 군수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1심 격인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의도 브리핑

민형배 “행정통합 동력 위해 신산업 벨트 조성필요”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대구 모 인구 유입을 뒷받침할 신산업 거점 구축과 전담 국가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의원은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동력을 얻으려면 인구 100만명 정도가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주도할 정부 부처인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신설하고 관련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제안한 개발청은 기능 통합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성장 전략을 실행하는 초광역 거버넌스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남해안권을 아우르는 성장 동력을 확보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추구했다.

민 의원은 “정권 교체 등 외부 변수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금액을 법정교부금 형식으로 법에 못 박아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과감히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간담회’에 참석해 균형 발전을 위한 시군구 특화산업 지정 및 개발 방안을 특별법 특별 조항에 담자고 건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인철 “빅테크 서비스 변경 전 사전 통보 법제화”

유튜브나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국내 통신망 혼란을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대형 사업자의 일방적인 행위가 국내 통신 생태계에 끼치는 파급력이 커졌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현행법상 사전 통보 의무가 존재하지만 시점과 절차가 모호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망 중립 등 기술적 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017년 페이스북이 예고 없이 트래픽



명시했다. 필요시 장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은 망 불안정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에 걸맞은 제도적 책임을 확보해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국힘 초·재선 “한동훈 제명 재고해달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만간 이른바 ‘당원 계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할 것이라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10여명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정례 조찬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징계 문제와 관련, “장 대표의 단선이 당의 통합과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

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은 통합이라는 ‘덧센 정치’를 하는 상황에 우리는 오히려 내부에 있는 사람들조차 배제하는 정치가 맞느냐, 당 밖에 있는 개혁신당과 연대하자고 하면서 내부 사람들까지 배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당 지지자 상당수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징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를 향해서도 “지지자들의 집회 중지 요청 등 당의 화합과 정치적 해법 모색을 위한 노력을 국민과 당원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한 데 이어 “당내에서도 서로를 비난하고 적대시하는 모든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희,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치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